

집 '중'기 '획'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을 열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에게 듣는다 _ 문화일반

예술의 새로운 대응과 자기 갱신에 무한한 신뢰를 두는 지원정책

culture 'art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이 민간 주도의 위원회 체제로 전환되었다는 것의 의미는, 문화예술 현장의 요구를 훨씬 구체적으로 수렴하되, 지원의 목표와 당위성을 설득해 낼 수 있는 논리 개발과 실천을 확장하여 문화예술진흥에 기여하는 지원정책을 수립하는 데 있다. 이제 위원회에서 마련하는 지원정책의 이념과 철학이, 어떻게 한국사회에서의 예술의 가치를 구현할 것인가로 이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박신의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 문화일반
- 문화중심도시조성위원회 위원 (04-현재)
- 청와대 정책기획위원회 위원 (04-현재)
- 경희대 경영대학원 문화예술경영학과
주임교수
- 예술경영전공

기본적으로 문화예술진흥은 지원정책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하지만 지원이란 단순한 보조나 일시적인 대체자원의 동원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지원을 통해 무엇을 얻을 것인가에 대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동기의 부여라고 보고 싶다. 그런데 이제까지의 양상을 보면, 지원이 무엇을 목표로 하느냐를 헤아리기 보다는, 누가 지원을 받고 못 받고를 가리는 '분배의 공정성' 시비에 집중되면서 매년 흥역을 치루며 지내오지 않았나 싶다. 물론 그간 문화예술진흥원 체제에서 지원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나름대로 지원의 항목과 방식을 개발해 왔고, 그 점 많은 진전을 보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관 체제라는 것의 속성이 언제나 일정한 지원의 틀과 형식을 만들고, 그에 준하는 평점 방식에 근거하여 집행의 편의성에 더 치중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그 자체로 한계가 아니었을까 생각해 본다.

예술 진흥과 이를 매개로 하는 예술의 사회적 가치 실현

이제 민간 주도의 위원회 체제로 전환되었다는 것의 의미는 문화예술 현장의 요구를 훨씬 구체적으로 수렴하되, 지원의 목표와 당위성을 설득해 낼 수 있는 논리 개발과 실천을 확장하여 문화예술진흥에 기여하는 지원정책을 수립하는 데 있다고 본다. 앞서 필자는 지원을 일종의 '동기 부여'라 말했지만, 실제로 그것의 의미는 예술가들의 창작 활동이 그 자체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창작활동의 사회적 순환을 고민하도록 하는 맥락에서의 동기 부여라 말하고 싶다. 그렇게 되면 예술가의 창작 자체를 지원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창작의 수준을 향상하고, 이를 보급하고 공유하는 매개와 향유의 차원으로 이어지면서 예술의 사회적 가치 구현이라는 전제가 분명하게 살아날 수 있다고 본다.

예술의 창의성을 모태로 하는 문화 개념의 전제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 부여된 '문화예술'이라는 복합명사를 어떻게 이해하느냐도 실질적인 위원회의 위상 설정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 문화예술을 문화와 예술을 합한 것으로 이해하면서 마치 시민문화, 일상문화가 따로 있고, 특정 예술인에 의한 예술이 따로 있는 것으로 구분하는 도식을 벗어나는 것이 필요하다. 실제로 시민문화와 일상문화는 다양한 기반시설이나 창작활동을 통해 창의성이 삶의 차원에서

형성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예술의 창의성을 모태로 하는 문화개념의 제안이고, 예술의 사회적 관계를 구현하기 위한 '새로운 예술'의 실천이라고 할 수 있다. 예술창작이 대중을 만나는 방식을 삶의 차원으로 확장하면서 곧 새로운 예술의 실천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말이다. 결국 예술진흥의 당위성을 '예술에 의한 문화적 가치 구현'이라는 관계 속에서 제안할 수 있다.

사회통합을 이룰 수 있는 문화적 접근의 시각 제시

예술의 창의성을 모태로 하는 문화 개념을 제안하게 되면, 다시 사회 통합에서의 문화적 접근의 가능성을 이야기할 수 있다. 문화예술교류를 통한 남북교류의 효과, 여성예술을 통한 여성정책에서의 효과, 한류를 통한 한일교류의 효과, 청소년 예술 교육으로 가능한 청소년 정책의 효과, 미술치료 및 연극치료 등을 통한 예술치유의 가능성, 소수자 문화의 이해를 위한 행동주의 예술의 효과, 도시 및 지역문화 공동체 수립을 위한 공공미술의 효과, 지역문화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한 예술경영의 효과 등이 바로 사회적 통합에 기여하는 예술의 형태라 할 수 있다.

창작환경 개선 및 법제도 연구를 통한 정책 개발

이제까지 지원은 결과에 대한 지원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창작의 전 과정을 살펴보면, 결과에 충실한 지원이라는 것이 실질적인 예술가의 지위나 창작 환경 개선에 큰 도움이 될 수 없음을 누구나 알고 있다. 그런 점에서 지원정책은 창작의 전 과정에 개입하는 것이어야 하며, 이에 따라 창작 환경 지원정책이 실제로 창작 결과물의 질적 향상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것이며, 동시에 예술가의 사회적 지위를 확보하는 데도 필요한 정책이 되는 원리가 나온다. 결국 예술 진흥의 목표가 예술의 사회적 가치에 대한 실현이라고 한다면, 실제로 지원정책은 예술가의 사회적 존재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일에서 주어진다고 하겠다. 이에 위원회의 정책 개발은 창작 환경과 예술가의 사회적 지위 확보를 위한 법제도 연구를 포함해야 한다고 본다.

문화변동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예술의 자기 확장

기본적으로 위원회 내의 장르 구분은 다소 편의적인 것이라

할 수 있다. 오히려 강조되어야 할 점은 각 장르가 새로운 문화현상과 사회변동에 대해 어떠한 대응을 보이면서 자기 갱신과 개념적 확장을 이루느냐에 있다고 본다. 실제로 문화산업의 팽창과 디지털 환경에 대한 이해를 예술창작의 확산과 보급으로 이해할 경우, 각 장르 예술의 대응은 훨씬 적극적으로 취해질 수 있을 것이다. 일테면 TV 및 각종 미디어와 예술의 관계를 고민하면서 문화산업에서의 기초예술의 위상을 강조할 수도 있다. 특히 미술을 시각예술로 한 경우에, 이미 미디어환경에 대한 대응을 내포한 것이 된다. 그런 점에서 지원의 항목과 방식은 기존의 미술 개념을 확장하면서 제안될 수 있다. 어쩌면 위원회 내부에서 이러한 환경 변화에 대한 확장된 예술 장르 개념과 장르 간 통합적인 성격에 대해 많은 논의가 있어야 하리라 본다.

평가 체계 및 지표 개발과 위원회 부설기관의 강화

문화예술진흥은 지원을 주요 사업으로 설정함으로써 성격상 지원에 대한 효과를 평가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평가는 대체로 결과 중심으로 국한된다는 점에서, 자칫 결과 중심의 평가는 예술 창작에 대한 관리 내지는 통제로 받아들일 수 있다. 그런 점에서 평가에 대한 중요성을 주장하기 이전에, 먼저 '지원의 원칙과 기준'의 정교한 틀이 주어져야 한다. 따라서 평가 체계 및 지표 개발은 지원의 원칙과 기준의 제안과 동일한 과업이 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위원회 전환 이후 4개 시설의 존속문제는 위원회의 몫으로 남아있다고 본다. 기본적으로 4개 시설은 문화예술진흥정책의 실현과 실험의 공간으로 활용되어 진흥정책 개발에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제 위원회에서 마련하는 지원정책의 이념과 철학이, 어떻게 한국사회에서의 예술의 가치를 구현할 것인가로 이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그래서 한국사회의 예술교육이 새롭게 거듭나게 하고, 사회적 의제로서의 예술창작의 문제가 거론되게 하며, 이로써 문화사회, 문화국가의 면모를 만들어가는데 초석이 되도록 하자는 것이다. 지원이란 단순한 기금의 배분이 아니라, 창작을 활성화하고 그 결과물을 민주적 방식으로 공유하면서 한 사회의 문화 발전에 기여하게 되는 순환구조의 원리를 갖는 동적 개념이기 때문이다.